



한국외교 60년

제1장

주변 4국 및 지역외교

제1절 주변 4국 및 동북아 지역외교 | 55

제2절 지역외교 | 75

제1장 주변 4국 및 지역외교

한국외교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위상을 다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는 지정학적·역사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외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한국의 독립과 정부 수립,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진 세계적인 냉전 구조의 형성과 와해 과정은 한국과 이들 4국과의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어 왔다. 따라서 아직도 냉전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 나아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각 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력 신장, 남북관계 양상 등에 따라 달라져 왔다. 1970년대까지는 남북한이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및 비동맹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던 시기로 북한을 압도하는 외교기반 구축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 중단 및 비동맹의 영향력 약화 등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는 자원 확보와 수출시장 확대라는 실질적인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이들과 실질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기반 확대는 1990년대 계속되어 온 북한 핵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폭넓게 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000년대의 한국외교는 주요국과의 기존 양자외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대부분 지역과 정치, 경제, 에너지,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등 사안 중심의 협력에서부터 광범위한 지역외교까지 협력관계의 범위를 넓혀가며 21세기 ‘글로벌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절 주변 4국 및 동북아 지역외교

1. 대미외교

가.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미국은 한국외교 60년 동안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다. 따라서 한국의 대미외교는 한국외교 60년과 흐름을 같이 하여 왔고, 한국외교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 제국 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부 수립 초기인 1950년대 한국외교의 초점은 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대미외교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의 정통성을 계승한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안보협력에 있었다.

남한에서 1948년 5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곧이어 미 정부는 1949년 1월 1일 우리 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하고 주한 외교대표로 활동 중이던 존 무초(John J. Muccio) 대표를 3월 초대 주한미대사로 임명하였다. 우리 정부도 같은 해 3월 주미 한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장면 박사를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하였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나, 미국은 1949년 6월 군사 고문단 500여 명을 남겨놓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켰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미국은 7월 곧바로 지상군을 부산에 상륙시킴으로써 한국 방위에 앞장섰다. 전시 정부의 대미외교는 무기와 병력의 지원을 포함한 군사원조의 획득과 유엔을 통한 '북한' 및 '중국'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에 주안점을 두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정부는 대미외교의 최우선 순위를 군사 및 경제원조 확보에 두고, 전후 복구와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정전협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1953년 10월 체결하여(1954년 1월 15일 한국 국회 비준, 1월 26일 미국 상원 비준) 조약에 근거한 한·미 동맹관계를 수립하였다.

나. 냉전체제 변화와 한·미동맹 발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혁명공약’을 통하여 반공(反共)을 국시로 삼고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어 11월에는 박정희 장군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경제 지원을 확보하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에 따라 1964년 9월 1차 월남 파병을 시작하였다.

1969년 7월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은 꾀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들의 방위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을 선언하는 ‘꾀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고조된 동서 대타트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중국 및 소련 등 공산진영과 화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으로, 주한미군도 1971년 3월부터 6만 1,000명의 병력 중 2만 명이 감축되었으며, 1972년 4월 윌리엄 로저스(William P. Rogers) 미국 국무장관은 의회 증언을 통해 1975년부터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가 종료될 예정임을 밝혔다.

세계적인 차원의 대타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국내적으로는 오히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으며, 1971년 7월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표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자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였고, 한국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이 단행되면서, 미국 의회

내 반한(反韓) 분위기도 조성되는 등 긴장 국면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974년 11월 제랄드 포드(Gerald R. Ford)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미군 감축 등으로 야기된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1977년 지미 카터(James Carter)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하여 한·미 관계는 큰 진통을 겪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인권외교 추진과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한·미관계의 긴장이 높아졌다. 친한(親韓) 여론 조성을 위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한 이른바 ‘박동선 사건’을 둘러싸고 1976년에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미 불법로비 청문회를 실시하여, 한·미 양국 간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었다. 한편, 카터 행정부의 철군정책은 미 행정부 내의 반발과 의회·언론 등의 반대에 부딪혀 1978년 4월 철군 일정 연기가 발표되었다. 같은 해 11월 주한 미 지상군의 일부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완하고, 한·미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하에 대소 군사력 우위 확보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의 일환으로 우방국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양국이 1981년 1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1970년대 후반 다소 소원해졌던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0년대 초 소련의 해체와 공산권 붕괴 등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겪으면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포함, 동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문제가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1990년 4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EASI에 의한 주한미군의 단계별 감축 계획은 1992년 1단계 감축 계획에 따른 7천 명의 주한미군 감축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1994년 보류되었다. 이후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는 1995년 2월 동아시아 주둔 미군 규모를 20세기 말까지 적어도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동아시아·태평양 전략(EASR: East Asia Strategic Report)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철수는 일단 중단되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게 되었다.

다. 한·미 경제관계의 발전

1948년 정부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복구 기간인 1950년대의 한·미 경제관계는 미국의 일방적인 원조 이외에는 이렇다 할만한 경제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1945년 광복 이후 1960년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구호, 전후 복구 및 경제 부흥을 위한 무상원조는 12억 1,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한국전쟁 중 미국이 지출한 전비(戰費)가 18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과 본격적으로 쌍무적인 경제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군사 정부가 자립경제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였다. 196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집행하면서 정부는 자본 및 기술협력,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에 대한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1965년에 한·일 간에 이루어진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 산업화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1978년에 이르러 한국은 미국의 제11위 수입시장, 제13위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총 교역이 70억 달러에 달하여 한·미 경제관계는 종래의 일방적 수원국(受援國) 입장에서 탈피,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급증하는 과정에서 1980년대부터 한·미 간에 무역 마찰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양국 간 교역에서 한국이 86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한 1988년을 정점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심각한 현안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연간 최대 116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1998년부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미 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현안을 양자 협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비교적 순조롭게 해결하여 대체적으로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8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에 이어 우리의 4위 교역 상대국이다.

이러한 한·미 경제관계의 발전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로 이어졌다. 한·미 양측은 2006년 2월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한 이래 상품, 서비스, 무역구제 및 지적권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고위급 협상 등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현재 양국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 간 파트너십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된다.

라. 북한 핵문제와 한·미 공조 체제의 강화

1990년대에 들어와 냉전 구조의 와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방 외교를 통하여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 노력을 경주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미 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긴요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 초에 북한의 핵개발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정책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1993년 3월 북한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거의 동시인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하고 위기 국면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 중 개최된 1, 2단계의 미·북회담을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은 1994년 3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사찰 거부 및 탈퇴 등으로 더욱 고조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및 김일성과의 면담은 상황 타개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과 북한은 3단계 미·북회담을 통해 1994년 10월 ‘미·북 간 기본합의문(1994년 10월 21일, 일명 ‘제네바 합의’)’을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을 동결·해체하는 것을 대가로 한·미·일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인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호기 완공 시까지 매년 중유 50만 톤의 대체에너지를 공급해 주기로 하여 북한 핵문제는 일단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 및 KEDO와 북한 간의 경수로 공급 협정 등은 한·미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조율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998년 중 금창리 핵시설 의혹이 제기되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함에 따라, 의회 등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조치와 제네바 합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게 되었다. 미국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소위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에 관한 협의와 조율이 계속되었다. 미·북 간에는 1999년 9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잠정중단(moratorium) 합의, 2000년 10월 조명록 북한 특사의 방미와 미·북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2주 후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eine K. Albright)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 6월에는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후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미국 대선에 의해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미·북 간 직접 대화 국면은 중단되었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변화된 미국의 세계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하는 등 보다 엄중한 입장에서 대북정책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이를 통해 제네바 합의 이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래식 군비·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 문제로 제2차 북핵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2003년 8월 시작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6년 7월)와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등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과 이후 합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2단계(불능화) 조치 완료를 위한 검증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핵문제 관련 교착 상태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한·미 전략동맹 발전과 대북 상생·공영정책 추진을 표방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2009년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09년 4월) 및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일련의 도발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타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도 단합된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한·미동맹 재조정 및 미래지향적 발전 추진

한·미동맹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한편, 탈냉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9.11 테러사태와 같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의 대두, 한국의 발전,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및 세계화의 조류 등에 맞추어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미동맹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 서울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및 관련 부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기지를 2단계에 걸쳐 중부 및 남부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07년 2월에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하에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안보협력 분야에서 주한미군 28,500명 수준 유지,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차관(FMS: Foreign Military Sales) 격상,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지 및 공고한 안보태세 강화 확인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오바마 정부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은 2009년 6월 16일 워싱턴 개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채택하여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2. 대일외교

가. 국교정상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수립과 국가 재건을 위한 자립경제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대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은 반일 성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당시 평화선을 둘러싼 어업 분규와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던 한·일관계를 방치할 수 없었고, 연합국측의 대일 강화조약에 따른 청구권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1951년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부터 한·일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국교정상화 교섭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장면 내각 때 재개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된 지 14년 만에 박정희 정부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1965년 6월 한·일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포함하여 6개의 조약과 협정이 서명되고, 그해 12월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한·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

나. 청구권 자금과 경제협력

한·일 국교정상화 후, 청구권 자금으로 1965년부터 10년간 한국이 공여받은 총 6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 차관 1억 달러)는 국민총생산이 20억 달러 미만이던 그 당시에는 큰 의미를 갖는 액수였으며,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일련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공업화와 수출입국을 통한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청구권 자금의 활용을 통한 공업화와 수출입국의 과정은 한국이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발전시켜 온 과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수출입국 과정에서 공업화에 필요한 산업 시설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수출 증가와 비례하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일 무역구조의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다. 재일한국인 문제 개선 노력

1965년 6월 체결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협정’에 따라 60만 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협정에 따른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나, 조총련 소속 동포들은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여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영주권을 획득한 민단계 동포들의 경우에도 협정과 무관하게 거주, 교육, 연금, 취업 등 민생·복지 분야에서 제도적, 법적인 차별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별 시정을 위한 일본과의 교섭을 계속하여 1991년 11월 ‘재일한국인 3세 이하 자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외무장관 간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매년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재일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방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 또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 및 지방 참정권 부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2009년 들어 단기간 출입 시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는 등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라. 과거사 문제의 진전과 후퇴

1981년 한·일 양국 간에 야기된 교과서 분쟁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기도로 비추어짐으로써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한·일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의 명분을 둘러싸고 양국관계는 긴장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3년 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의 한국 방문으로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차관이 합의되고, 19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국민 방문하여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일본 천황은 국민 만찬사에서 양국관계의 과거사를 반성하는 언급을 하였다. 그 후에도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과거사를 반성하는 언급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일부 현지 각료들이 일본의 과거사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양국관계가 경색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군대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모집에 대한 관여 인정과 사과 표명이 있었으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조치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에 의한 역사왜곡 발언은 여전히 반복되었으며, 양국 간에는 독도 접안 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마찰도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1997년에는 일본측이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방일 시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한·일 우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공동선언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여 한·일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과거사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양국관계의 민감한 사안으로 남겨져 있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작성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문제(2001년, 2005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2001-2005년) 및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년),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2008년) 등으로 양국 간 긴장 국면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한·일 양 정부 공동의 노력으로 협력의 성과도 있었는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시행되어 3천 명이 넘는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국이 이루어졌으며,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교 노력의 성과로 2008년 6월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주 원폭피해자도 한국에서 건강 수첩을 교부받아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2009년 2월까지 국내 한센인 426명이 일제 식민지하 강제격리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일본 유테지(동경) 소재 한국인 구군인·군속 유골 160위를 두 차례에 걸쳐 국내로 봉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마.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모색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양국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단계적이되 상당한 속도’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을 천명하고, 영화, 비디오, 만화 등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단계적 문화 개방을 실시하였다(1998년 제1차, 1999년 제2차, 2000년 제3차, 2003년 제4차).

아울러 1999년부터 한·일 양국이 실시기로 합의한 한·일 취업관광사증제도(Korea-Japan Working Holiday Visa Program)는 1999년 1,000명 규모에서 2006년 3,6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9년 7,200명,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06년 3월 한·일 양국이 ‘단기(90일) 사증 항구적 면제’ 조치를 실시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 방일 계기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김포-하네다 간 셔틀 항공편 개설에 합의하고, 2004년 12월 김포-하네다 셔틀 항공편을 1일 4편에서 8편으로 증편하여, 한·일 양국의 접근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방한 일본인 수가 1999년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3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일 한국인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일본 입국 외국인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가까워진 양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한·일 중·고교생 교류(1999년부터 실시), 한·일 이공계 유학생 교류사업(2000년부터 실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선포, 2007년 조선통신사 4백주년 기념 사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호·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계기 및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시 각각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경제·문화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성숙한 양국관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부품·소재 산업협력, 여수 박람회 개최 지원, 국제금융위기 공동대처 등 경제·금융 협력 강화와 한·일 취업관광사증제도 확대 실시,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실시 등 청소년교류 확대, 1999년부터 실시된 한·일 이공계 유학생 파견 사업의 연장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저변을 확대해 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95년 창설된 KEDO 콘소시움에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2003년 이래 6자회담에 참가하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우리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3. 대중외교

가. 국교정상화

한국외교 60년에 있어 공식적인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17년째에 접어들었으며, 그 이전 43년간은 대만(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만은 1949년 1월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승인하고 서울에 상주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전후 복구 기간 중에도 한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한편, 1949년 10월 1일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군대를 파병하여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적성국가로 분류되었

으며, 남북한 간의 대립과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 관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것은 양국의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교류의 역사 등을 감안해 볼 때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교류 단절의 기간이 근 반세기 동안이나 이어진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동서 진영 간 냉전체제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기인했다고 할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 국교 수립은 당시 구소련 및 동유럽권 붕괴 이후 탈냉전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반세기 동안에 걸친 양국 간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수천 년간 계속되어 온 역사적 교류를 회복하여, 미래를 향한 양국 간의 새로운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을 우리 정부가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대만(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대만과 단교하고, 한때 한국의 적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대만과는 단교 과정의 후유증으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민간 차원의 통상·항공관계 등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나.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는 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중국 대륙과의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비약적으로 전개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가장 현저한 발전을 보인 분야는 경제·통상 및 양국 국민 간 상호 왕래 등 실질 분야에서의 교류였다. 예컨대 수교 이전부터 소규모의 간접 교역으로 시작된 양국 간 교역은 교역 총액 면에서 볼 때 수교 연도인 1992년 64억 달러로부터 수교 16년 후인 2008년에는 약 1,683억 달러에 육박하여 26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교역과 함께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투자도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수교 직전인 1991년 말 당시 1억 달러가 채 안되었던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수교 후 16여 년이 지난 2008년 말 약 383억 달러(신고액 기준)에 달해 383배 가까이 증가하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양국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통상은 물론 각종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양국 국민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즉, 수교 첫 해인 1992년에는 8만 8,000여 명에 불과했던 양국 간 상호 인적 교류는 2008년에는 513만 명에 육박할 만큼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적 동반자관계’가 구축되었고, 이어,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양국관계가 격상되었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는 양국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한·중 양국이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자-한반도를 포함한 지역-범세계적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9년 한국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경제·통상 등 실질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간 발전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계기로 이러한 시각은 변화해 가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활발한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 방향 및 공통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협의 및 협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수교 이후 한국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에서도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양국 간에는 정상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정치·외교관계의 발전 도모와 아울러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양국은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왔으며, 특히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정치·외교 및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이나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국제기구나 범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 등 각종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상호 입후보 지원이나 정책 협조는 물론, 환경, 금융, 에너지, 인권,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문제 등 제반 범세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1999년 ASEAN+3 정상회의 시 일본측의 제의로 한·중·일

* ‘ASEAN+3’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한·중·일 3국을 일컫는 용어로서, 전체 본문에서는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로 표기한다.

3국 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래, 한·중·일 협력이 발전되어 왔으며,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국교 수립 이후 지난 17년 동안에 이루어진 제반 분야에서의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약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다만,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발전 가운데에서도 지난 2004년에는 고구려사 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양국 국민 간 부정적 정서 문제도 부각된 바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양국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수천 년에 걸친 양국 간의 긴밀한 교류 경험과 지리적 인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그리고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에 기초해 볼 때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은 2003년 이래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는 등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고, 고위 인사의 방북 등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4. 대러외교

가. 국교정상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한국의 국권 회복, 한국전쟁과 그 이후 남북한 간의 긴장과 대치 상태, 세계적인 냉전 구도 및 와해 등 일련의 시대적 정세 변화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남북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철수를 위한 미·소 양국 군대의 한반도 진주,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전쟁 이래 1983년 9월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소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었으나, 소련 대표단의 1988년 서울 올림픽게임 참가를 계기로 체육·문화 분야에서 인적 교류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특히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와 냉전 종식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극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과 소련 간의 물밑 교섭을 통해 1989년 영사처 상호 교환설치 합의를 시작으로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었고, 마침내 1990년 9월 30일 양국 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라는 목표로 추진된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는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계기에 ‘한·소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1991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이 이어졌다. 이후 양국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1991년 12월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1992년 11월 보리스 옐친(Boris N. Yeltsin)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등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나. 한·러관계의 발전

한·러 양국은 짧은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왔다. 한국 북방외교의 목표가 중국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있었던 만큼, 한·소 수교를 통하여 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소련을 한국의 지원세력으로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반면 소련측은 한반도 문제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수교 이래 한·러관계는 1998년 7월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러와 2001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 Putin)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신뢰를 강화하였다. 그 이후 양국 관계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러 계기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양국 정상 간 교류는 수교 이래 열 차례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APEC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19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간 교역은 수교 당시 9억 달러 규모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6년에는 37억 달러에 달했으나, 1997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외환위기와 1998년 8월 러시아의 대외채무 지불중지 선언 등으로 경제 교류가 크게 위축되어 1998년에는 20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후 한·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이 확대되면서 교역액은 2006년 98억 달러, 2007년 150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를 기록하여 계속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역시 활성화되어 2008년 말 현재 신고기준 총 누계액은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표적 투자 사례로는 연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삼성전자의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주 공장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를 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2003년 이래 6자회담의 일원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평화안보체제(NEAPSM: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추진

오늘날 한·러 간 협력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에너지자원,

우주항공,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나노 등 첨단기술,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2015년부터 30년간 연 750만 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고, 서캄차카 해상 광구의 공동개발도 합의되어 에너지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는 사할린산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가 매년 150만 톤씩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양국 간 우주과학기술협력을 통해 2008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였고, 2009년에는 소형위성 발사체(나로호) 발사 사업도 추진하였다.

한·러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8년 9월 유명한 외교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2009년 4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V.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의 남북한 순차 방문을 비롯하여 ASEAN 지역안보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양국 외교부의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러 전략대화가 2008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어 외교 당국 간의 정례 협의채널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한·러 양국은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계기 고위 인사 교류와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동북아 지역외교 강화

2000년대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 간 회합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 발전을 향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일본측의 제의로 시작된 한·중·일 3국 간 정상회의는 2002년 공식화되어 매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3국이 의장국을 번갈아 수입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초기에는 3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 대ASEAN 협력을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재난관리, 해양구조 등 비전통안보와 북핵문제, 환경·기후 변화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와 차별되는 보다 높은 차원의 3국 정상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2004년 이래 3국 간 별도 정상회의 개최를 지속 제의하였다. 그 결과 제1차 별도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됨으로써 ASEAN+3의 틀에서 탈피하여 3국 간 독자적인 협력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외교, 재무,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등 각 분야에서 15개의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하여 5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제2절 지역외교

1. 아시아 지역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의 한국외교는 정부 수립에 따른 국가 승인 획득 및 자유 우방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아시아 지역 외교도 이러한 기본목표에 입각하여 아시아의 신생 반공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필리핀(1949년), 월남(1956년), 태국(1958년)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참전하였다. 그 후 한국과 이들 국가들과의 유대는 한층 심화·발전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립 세력의 등장 및 미·소의 관계개선에 따른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를 적극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버마(1961년)*, 인도네시아(1966년), 파키스탄(1968년), 네팔(1969년) 등 비동맹 중립국가들과 영사관계를 수립하였고, 말레이시아(1960년), 호주(1961년), 뉴질랜드(1962년), 몰디브(1967년)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외교망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는 1966년 6월 한국의 제창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SPAC: Asian and Pacific Council)의 창설을 보게 되어 이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ASPAC은 1972년 미·중 간의 화해와 1973년 호주 노동당의 집권에 따른 호주 정부의 정책 전환,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1972년 8월 서울 회의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1970년대 한국외교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안전보장외교, 통일기반 조성 외교 및 경제·문화외교의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력 배양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총력외교를 전개하여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의 유대 및 협력 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캄보디아(1970년), 인도네시아(1973년), 라오스(1974년), 싱가포르(1975년)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의 공산화로 1975년 4월 이후 이들 국가들과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1970년대의 아시아외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버마는 1988년 9월 쿠데타로 새 군사 정부가 수립된 후 1989년 6월 미얀마로 국명을 개칭하였다.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5개국과의 유대 강화였다.* ASEAN 5개국은 대체로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며 아시아의 비공산 국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인도차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중·소 양대 국가의 ASEAN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노력에 편승하여 북한도 이 지역에 침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ASEAN과의 유대 강화가 절실히 요망되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고위 인사 교류, 무역 확대, 합작투자 추진 등 정치·경제 분야 모두에서 관계 심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비동맹 중립국외교를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1973년 6.23 선언을 계기로 아시아 비동맹 중립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무상원조 및 경제·기술협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1973년), 인도(1973년), 방글라데시(1973년), 아프가니스탄(1973년), 네팔(1974년), 버마(1975년), 스리랑카(1977년) 등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과의 외교관계는 1978년 4월 쿠데타로 집권한 친소 공산정권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되었다.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와도 경제·통상관계 증진 등을 통하여 쌍무적 실질관계를 한층 심화시켰으며, 남태평양의 신생 독립들과의 관계 증진 노력에 따라 통가(1970년), 피지(1970년), 서사모아(1972년), 파푸아뉴기니(1976년), 솔로몬아일랜드(1978년), 투발루(1978년), 나우루(1979년)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이 지역에 대한 어업 진출 등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 ASEAN은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결성되었다. 그 후 1984년 브루나이가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5년 베트남이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한편, 1997년 5월 ASEAN 특별 외무장관회의에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국의 가입이 결정되었으나 그해 7월 캄보디아 사태가 발발하여 캄보디아의 가입은 무기한 연기되고 7월 23일 미얀마와 라오스만 가입하였다. 그러다 1998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고 연정이 구성되는 등 사태가 호전됨에 따라 같은 달 ASEAN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의 가입을 결정하여 ASEAN은 동남아 지역 10개국 모두를 회원국으로 하는 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 정부의 아시아외교에 있어 ASEAN 국가와의 협력 확대 노력은 괄목할 만하였다. 한국과 ASEAN 국가들 간에는 고위 인사의 교류가 빈번하였고,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교역 증대 및 경제 협력이 활발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키리바시(1980년)와 바누아투(1980년) 등 태평양의 미수교국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서남아 제국과의 실질관계도 증진시켰는데, 버마는 1983년 랭군 사건 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반면, 한국은 파키스탄(1983년), 브루나이(1984년), 부탄(1987년)과 수교하여 외교망을 확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민주화 달성과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층 더 높아졌고,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한국의 아시아외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ASEAN 역시 동유럽 공산권의 와해, 지역경제의 블록화 및 국제관계에 있어 탈이념화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인도차이나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역외 국가와의 안보대화를 확대하였다. 동시에 한국은 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여 국제적 위치가 한층 더 제고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대부터 ASEAN과의 유대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1991년 이래 매년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 ASEAN Post Ministerial Conference)에 참석해 왔으며, 특히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도 초청되었다. 이 정상회의에는 ASEAN 9개국과 ASEAN 대화 상대국 10개국 중 한·중·일 3국의 정상이 참석하였다. ASEAN은 1994년 이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를 추진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으로 다자주의적인 세계 교역 질서가 확대되는 한편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의 지역주의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시아에서는 ASEAN과 한국, 일본, 중국이 참석하였으며, 제1차 정상회의가 1996년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동남아 지역은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미국, 일본, EU에 이어 4번째의 큰 교역대상 지역이 되면서, 매년 국민들의 상호방문이 증가하여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상호이해도 크게 증진되었다. 한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이 1970년대 공산화된 이래 오랫동안 인도차이나 3국과 외교관계를 갖지 못하였으나, 동유럽 공산권 와해와 이들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1992년), 라오스(1995년), 캄보디아(1997년)와 재수교하여 동남아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서남아 지역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경제개발 추진 노력 및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재정립 등의 뚜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약 13억의 인구와 방대한 영토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장기적으로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었다. 한국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에 대한 투자 및 건설 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 지역 국가들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한국과의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1990년대에 신생국인 마이크로네시아(1991년), 마셜군도(1991년), 팔라우(1995년)와 수교하는 등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며, 국가들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 자원 등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하여 한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체의 진출과 이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었다. 그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 태평양 지역 국가에

대해 기자재 무상원조, 봉사단 및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업 진출 노력을 계속하여 왔는데, 이 지역은 한국 원양어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진행된 범세계적인 세계화의 진전과 지역협력 강화 추세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였다. 한국외교는 기존 주변 4국 중심의 외교를 기반으로 다변화·다양화를 추구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외교 지평 확대의 핵심 대상이었다. ASEAN 역시 2008년 12월 15일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발효시키는 등 내부 통합의 진척과 더불어 역내 협력의 중심축으로 기능코자 하는 노력을 지속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통합 추세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외교적 입지를 높여나가고 있다.

1998년 12월 하노이 ASEAN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개국의 참석 정례화가 합의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2008년에는 태국 내 소요사태로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그 다음 해인 2009년 4월에 개최된 바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증장기 비전을 설립하기 위한 동아시아비전 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 Study Group)이 한국측의 제안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05년 12월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최초로 개최됨으로써 ASEAN+3, EAS, 한-ASEAN 정상회의 병행 체제가 성립되었다.

한국과 ASEAN은 2004년 11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007년 6월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을 발효하였으며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한국과 ASEAN 국가 간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한-ASEAN 센터’ 설립 양해각서가 발효되었다. 특히 2008년 한국과 ASEAN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한 한-ASEAN 특별 정상회의를 2009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한-

ASEAN 관계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중국, EU에 이어 3번째로 큰 교역 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매년 국민들의 상호 방문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400만 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도 크게 증진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억 4천만 달러의 유·무상원조를 제공하여 동남아 지역과 적극적 개발협력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남아 지역은 2000년대 들어 9.11 테러사태 이후 아프간·파키스탄 등의 지정학적 중요성 부각, 인도·파키스탄 간 긴장완화 추세, 신흥경제강국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의 일원으로서 인도의 부상과 같은 요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7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으로 구성된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Cooperation)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역내 국가 간 경제력, 군사력의 차이 및 일부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2004년 제12차 SAARC 정상회의에서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서남아 지역의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통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SAARC 옵저버 국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국제협력단 사업 및 지방재건팀 파견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인도와는 2008년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문안이 타결되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한층 더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은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지역 중심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와는 APEC,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PMC 등 지역협력 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국제기구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왔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의 OECD 가입을 적극 지지·후원하였고, 한국도 호주의 ASEM 가입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해 왔고,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호주, 뉴질랜드의 상호 협력과 지지를 확보해 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주요 자원 수입국이다. 특히 한국과 호주 간에는 상호 대외교역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괄목할 정도로 증대되어 왔는데,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대상국이며, 호주는 한국의 8대 교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주와 한국은 보다 광범위한 국제안보 측면에서도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지역 안정과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99-2003년간 호주와 뉴질랜드가 주도한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들 국가와의 안보 협력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편, 남태평양 군소 국가들은 인구 증가, 정세 불안, 기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공유하는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등 지역기구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환경보호, 어족 자원 보존 등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 원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5년부터 PIF의 대화 상대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한-PIF 협력기금’을 설립하여 3년간 매년 30만 달러를 ‘대PIF 전자정부 초청 연수사업’에 지원하여 PIF

* 2002년 2월 동의부대(의료) 60명, 2003년 2월 다산부대(공병) 148명을 파병하였으나, 국회 결의에 따라 2007년 12월 전원 철수하였다.

참가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출범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ASEAN+3 체제를 넘어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중동을 포괄하는 협력체로서 아시아 지역 전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CD는 정책대화(dialogue component)와 협력사업(project component)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정책대화를 통해 역내 아시아 국가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개의 주요 협력 분야 중 IT 분야 협력사업의 선도국가(Prime Mo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7년 6월 4-5일간 서울에서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국 간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서울 IT 선언'을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서울 IT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ACD 회원국 중 일부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IT 관계자 초청 연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IT 관련 프로젝트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IT 협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회원국들의 정보화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통합 과정(ACD e-Government System Integration Course)'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서울 IT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IT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IT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 미주 지역

가. 북미 지역

캐나다는 1949년 4월 대한민국을 승인하였으며 한·캐 양국은 1963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총 2만 6천여 명을 파병하여 516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사망자 수는 총 16개 참전국 중 미국, 터키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 1963년 수교 이래 양국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왔으며, 국제·다자무대에서도 인권, 민주주의, 비확산 등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조해 왔다. 양국은 1993년 11월 시애틀 APEC 정상회담 시 수립한 ‘특별 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를 공고히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및 기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6자회담의 진전 등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 없이는 캐·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권 진출 전략에 있어 한국을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 아시아와 북미시장을 연결하는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sia-Pacific Initiative)를 추진하는 등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한·캐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2008년 기준 수출 약 45억 달러, 수입 약 4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2005년 7월 이후 한·캐 FTA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캐나다는 북한과 2001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 현재 주한 캐나다대사가 북한 대사를 겸임(북한의 경우, 주유엔 대사가 주캐나다 대사 겸임)하고 있다.

나. 중남미 지역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미국의 지원과 함께,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대대(大隊)병력을 파견하여 참전하였으며, 멕시코 등 수개국은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1950년대의 한국은 대미 위주 외교정책을 추구하였으며,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져 한국의 중남미외교 전개를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는 크게 진전을 이루어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외교기반을 구축하였다. 우리 정부는 멕시코(1962년), 페루(1963년), 우루과이(1964년), 베네수엘라(1965년) 등 총 20개 중남미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이 지역과의 유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서방 자유국가와 함께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유엔 내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편, 1960년대에 시작한 중남미 이민은 1962년 해외 이주법의 공포를 시발점으로 같은 해 12월 브라질에 농업 이민 18세대 92명을 이주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보다 계획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듯 1960년대의 중남미 제국은 한국외교의 독무대였으나, 1960년대 후반 피델 카스트로(Fidel Alejandro Castro Ruz) 정권하 쿠바의 영향력이 한국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일시적 좌경 정권이 출현하여 한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도 북한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외교망 확대는 197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그레나다(1974년), 수리남(1975년), 바베이도스(1977년), 도미니카연방(1978년), 세인트루시아(1979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1979년) 등 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양 지역 간 경제기술 협력과 교역을 통한 실질적 협력관계도 증대되었다. 한편, 북한의 중남미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칠레,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쿠바, 니카라과, 세인트루시아,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의 제3세계 반정부 단체에 대한 게릴라 훈련 등 혁명 수출과 외교관들의 밀수 행위 등이 폭로되어 아르헨티나, 칠레와는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우루과이에서는 통상대표부가 축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중남미 지역 정세는 우익 군사 정부에서 민정 이양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안정 기반을 추구하면서도 외채 등으로 인한 경제난의 지속으로 각국 정부가 그 타개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중미·카리브 국가들은 미국의 ‘카리브 지역 개발촉진계획(CBI: Caribbean Basin Initiative)’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독자 노선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 내 단결을 도모하며 중남미 지역 분쟁의 자체 해결을 위한 외세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유엔,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비동맹 회의 등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북한은 중남미 국가들의 독자 노선에 편승한 침투를 강화하고 총선을 전후한 혼란을 이용하여 좌익 내지 군소 정당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군사 정부들의 민정 이양 후 새로운 민간 정부에 대한 침투 공세를 강화하였고, 주요 야당 세력의 핵심인물을 친북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였다. 한편, 한국은 평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원칙에 따라 중미 분쟁사태 관련 ‘콘타도라 그룹(Contadora Group)’의 중재 노력을 지원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신생 독립국과 미수교국에 외교망 확장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안티구아바부다(1981년), 세인트키츠네비스(1983년), 바하마(1985년), 트리니다드토바고(1985년) 및 벨리즈(1987년)와 수교하여 쿠바를 제외한 역내 3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는 대통령과 총리 등 정상급 인사의 상호 교류도 활발하였으며, 다수의 중남미 제국과 과학기술협정을 비롯하여 문화협정과 어업협력협정 등 주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에서는 미국 우위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각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외채 문제 및 1차 상품가격의 하락과 아울러 선진국들의 동유럽에 대한 경제 지원 확대에 따른 중미 지역에 대한 지원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경제개발 노력이 강화되었다.

중남미는 냉전 시대부터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

해 준 전통적인 우방이었지만, 한국과 중남미 국가와의 실질협력관계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데 이어,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이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결과, 한·중미 대화 협의체, 한·남미공동시장 협의회, 한·리오그룹 트로이카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여,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이후 외교통상부에 대중남미 관계를 전담하는 중남미국이 창설되면서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경제·통상관계도 199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었는데, 중남미 지역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의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유망한 투자 지역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주우루과이와 주볼리비아 대사관이 폐쇄되는 등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망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00년대 중남미 지역에서는 민주적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민주주의 제도 정착과 정치적 안정이 공고화 되어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 일부 국가에서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자원 및 다국적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외환위기를 겪으며 약 5년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1차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따라 가파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중남미 경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가율 5.5%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대중남미 정상외교가 더욱 강화되고,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통상, 인사 및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 방문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관계가 그간의 정치 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넘어 경제·통상, 자원 등 실질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멕시코 및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 참석 차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페루 및 브라질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남미와의 실질협력 증진 기반을 구축하며 한국 내 중남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대중남미 외교가 활성화되면서 한국의 중남미 주재 공관도 확충되었다. 경제 위기로 폐쇄된 주우루과이 대사관(2002년)과 주볼리비아 대사관(2008년)이 재개설되고, 주니카라과 대사관(2007년)과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2008년)이 신설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 중남미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액도 2002년 120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470억 달러를 넘어서며 6년만에 약 4배 넘게 성장하였고, 대중남미 무역 흑자 규모는 2002년 51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90억 달러로 증가하여 중남미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시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누적 기준 대중남미 투자금액은 77억 달러(2,100여건)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GDP 2.7조 달러(2007년 기준)의 큰 부분을 책임지는 거대한 수출시장이자 전세계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의 요충지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FTA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3년 2월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인 한·칠레 FTA는 발효 5년 만에 양국 교역 규모를 18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4배 증가시킨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 정부는 현재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남미 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등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00년대부터는 한국의 TV 드라마가 중남미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방영됨에 따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중남미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중남미 국가에 다수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한국의 우수 영화들이 중남미 국가에 소개되어 중남미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함에 따라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에 한국 대중문화 애호가와 한류스타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외교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남미 역내 통합현상의 결과, 양자외교만큼이나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한국은 2005년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및 2007년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에 가입하였다. 우리 정부는 또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공동의장국과 지역조정국 역할을 수행하고, 미주기구,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카리브국가연합(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등 지역기구과의 협력사업 수행을 통해 대중남미 다자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유럽 지역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우리 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영국(1949년)을 시작으로 프랑스(1949년), 스페인(1950년), 독일(1955년), 이탈리아(1956년) 등의 국가들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재수립하였으며, 터키(1957년), 노르웨이(1959년), 스웨덴(1959년), 덴마크(1959년) 등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반면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 8개국은 대부분 1948년에 북한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 7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을 지원, 직접 참전하였으며, 전후 한국의 경제 재건을 위해 각종 원조를 제공하여 한국의 유럽 지역외교에서 중요한 지원국가가 되었다.

1960년대 정부는 명분을 위주로 한 1950년대 외교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 유럽 국가들과의 통상 증대, 투자 유치 등 경제협력 강화의 경제외교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른 통상사절단 상호 교환 방문, 적극적인 차관 도입 등으로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더욱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의 유럽 외교망은 대폭 확대되어, 1961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및 포르투갈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어 룩셈부르크(1962년), 아이슬란드(1962년), 스위스(1963년), 오스트리아(1963년), 교황청(1963년), 몰타(1965년) 등 10개국과 국교를 수립, 유럽 내 수교 국가가 1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프랑스와 실질관계 증진을 위하여 1968년 9월에 파리에 통상대표부만을 설치하였다.

1970년대에는 1960년대에 형성된 동서 진영 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세계 정치 구조가 다극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이념보다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세계 각국의 대외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외교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실질관계의 심화로 기존 유대관계의 강화, 북한의 서유럽 침투 저지, 대북한 우위확보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2년 ‘7.4 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개시하면서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발표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이러한 문호개방 정책에 영향을 받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은 1973년 북한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남북한에 대한 중립정책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정책을 추구한 핀란드 외에 다른 국가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항상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그 외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1970년대의 국제정세 변화와 한국의 평화통일 원칙에 영향을 받아 오스트리아(1974년), 스위스(1974년), 포르투갈(1975년)이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의 승인 없이는 북한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단지 경제적 실리를 이유로 1968년 프랑스가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설치를 허가하였고, 이탈리아, 영국 등이 북한과 민간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였으나 북한과 무역관계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우리 정부가 1973년 ‘6.23 선언’에서 긴장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한국과 함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북한은 1973년에 제네바 대표부를, 1976년에 파리 주재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대표부를, 1978년에 이탈리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의 확대로 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경제협력 및 교역을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는 1970년대 유럽 국가들과 사증면제협정(21개국), 무역협정(3개국), 항공협정(6개국), 투자보장협정(5개국), 이중과세방지협정(4개국), 공업소유권협정(2개국), 문화협정(4개국) 체결 등 다양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유럽 지역의 많은 나라들과 기존 우호협력관계 및 실질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럽 국가들과 고위 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과 EC 간 경제·통상 분야의 정기적인 협의체로서 1983년 외무장관급의 한·EC 고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럽 국가들과 경제사절단 또는 통상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관 합동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측에서는 주로 경제각료회의, 경제실무자회의, 경제협력위원회, 혼성위원회, 공동위원회 또는 과학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투자 및 합작사업 가능성을 협의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달성되어 한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단순히 전통 우방 국가로만 간주하지 않고, 경제·통상 및 정치적인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로 보게 되었다. 유럽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세 번째 교역대상 지역이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증가하자 한국과 유럽 간에는 지적소유권 문제, 보험·금융시장 개방 문제, 덤핑 문제 등 민감한 경제·통상 현안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유럽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정상 간의 교류도 빈번해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 국가 방문과 아울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의 한국 방문도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유럽 지역 개별 국가와의 관계 강화와 아울러 1990년대 초부터 심화되고 있는 EU 통합에 대처하기 위하여 EU와의 관계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1993년 6월 한국 결의안을 채택,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통상 관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어 양측은 1996년 10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한·EU 공동정치선언에 서명함으로써 한·EU관계를 경제관계로부터 정치·안보관계로 확대하였다. EU 국가들은 항상 북한 핵문제, 남북한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EU는

1997년 9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집행이사국이 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은 비회원국으로서 KEDO에 기여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북방외교가 구 동유럽 지역에서 큰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폴란드(1989년), 신유고연방(1989년), 체코(1990년), 불가리아(1990년), 루마니아(1990년) 등과 수교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대유럽 진출 거점으로서 주요한 투자대상 국가가 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는 보다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4-2005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순방을 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21세기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면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2000년대 초반 약 800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약 1,000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유럽국가와 한국 간 상호 투자는 약 7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주체가 되었다. 이런 무역·투자 관계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2007년에 한국은 EU와 FTA 체결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EU와의 정치, 일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내무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 체결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EU관계를 두 협정을 기본 축으로 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5일 핀에어(Finnair)의 한-핀란드 직항노선 취항을 계기로 공식 실무방한한 마띠 반하넨(Matti Taneli Vanhanen) 핀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년 10월 24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7차 ASEM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안다스

포우 라스무슨(Anders Fogh Rasmussen) 덴마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한·EU FTA 및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동 회의 계기에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은 한·EU FTA 체결 등이 한·EU관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국은 신규 EU 회원국들과도 적극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을 통해 한-루마니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고 2008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에너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 및 군사장비 조달사업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럽 지역 개별국가들과 정책협의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실무협력도 강화하여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재 EU,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터키,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4. 중동 지역

우리 정부는 1950년대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과 위태로웠던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미 및 유엔외교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에서의 지지 획득 목적을 제외하고는 중동 국가들과의 접촉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

1960년대 들어서야 동서 진영 화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 노력을 시작했고, 비로소 중동외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1년 이집트와의 영사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62년 요르단, 모로코, 이스라엘, 사우디, 1963년 모리타니와 외교관계를 맺는 등 중동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랍·이스라엘 관계가 몹시 경색되었던 1960년대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1948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된 이후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은 아랍민족주의를 주창하던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를 선두로 이스라엘과 두 차례(1948년, 1956년) 전쟁을 치렀으나 패배하여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망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대아랍 외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스라엘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962년 4월 이스라엘과 수교하였고, 이에 아랍 국가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그 결과 1963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유엔 결의안에 대한 아랍측 지지는 전무했고, 이들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동외교는 1960년대 아랍 7개국(북예멘, 알제리,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남예멘, 수단)과 수교를 체결한 북한과 비교하여도 뒤쳐지는 수준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우리 정부는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비동맹 중립 입장을 견지하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함을 깨닫고 아랍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이스라엘이 주일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동안 주이스라엘 대사 임명(겸임대사)을 보류하였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이스라엘 관계를 제한하고 대아랍 우호정책을 선택하였다. 1973년 12월 제4차 중동 전쟁이 종결됨과 동시에 아랍 산유국이 친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중지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12월 중동문제에 있어서 아랍측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오만, 카타르, 바레인, 수단, 모리타니 등 아랍 5개국과 수교를 맺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온건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 달러로 부유해진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

1980년대 원유 수출로 축적된 막대한 수입에 힘입어 아랍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동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친아랍 정책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강에 힘썼다. 1981년 우리 정부는 자결권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를 인정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성화시켜, 1980년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방문하였고, 1983년 가파르 모하메드 누메이리(Gaafar Mohamed el-Numeyri) 수단 대통령과 후세인 빈 탈랄(Hussein Bin Talal) 요르단 국왕이 방한하였다. 또한 경제사절단, 건설협력단을 중동 국가들로 파견하고 각국들과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동 국가들과의 통상·경제관계를 강화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한·중동관계는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1998년까지 총 중동 17개국과 외교관계를, 이집트와 영사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는 북한이 14개국과 수교하고, 쿠웨이트 1개국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한 데 비해 우세한 것이었다. 또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원유 도입을 확보하였고, 1966년부터 1978년간 140억 달러의 건설 계약고를 실현한 한편, 1980년대 중동 각국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였으며, 역내 한국 교민 수도 급증하였다. 그 밖에도 우리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문화협정, 경제기술협정, 항공협정, 이종과세방지협정 등을 체결했고, 건설·은행·어업 분야에서의 합작회사 설치·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했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에게 무상원조, 기술

연수생 훈련 등을 제공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중동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추진된 중동 평화회의를 적극 지지했으며,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인 ‘오슬로협정’ 체결 결과 화해 모드가 조성되자, 팔레스타인원조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대팔레스타인원조에 동참하였다. 또한 걸프전 때는 중동 평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국적군 경비 부담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을 파견하였으며,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협력개발은행(MENA Bank: The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설립 등 중동 개발을 위한 다자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알제리(1990년), 이집트(1995년)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가능케 하여, 우리 정부는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동 간 협력이 다소 침체되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와 산유국들의 석유 과잉 생산으로 인해 1980년 35달러이었던 국제 유가가 1986년 10달러 이하로 급락했고, 이에 따른 역내 경기 침체로 많은 국책 건설 프로젝트들이 취소되면서 한국 건설업체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이라크, 쿠웨이트 등지에 진출해 있던 한국 건설업체들은 1991년 걸프전 발발 당시 철수하여 중국, 동남아 건설 시장으로 관심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금융위기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대중동외교 노력이 잠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국민의 정부 들어 한·중동관계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99년 한 해에만 모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Mohamed Hosni Mubarak)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타니(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카타르 국왕, 압둘라 빈 알 후세인

2세(Abdullah II Bin Al-Hussein) 요르단 국왕이 방한했고, 2001년 5월에는 한국의 국무총리가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오만 등 중동 4개국을 순방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한·중동 간 협력관계가 활성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점차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사회 인프라 건설을 재개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중동 산유국들과의 공동위, 정책협의회 등 양자협력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중동 평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 정부는 담수화를 통한 물 분쟁 해결을 바탕으로 중동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1996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설립한 ‘중동 담수화 연구소’에 창설 이사 자격으로 참여한 이래로 동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한편, 1998년 워싱턴 ‘팔레스타인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여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상원조를 확대시켰으며,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여 약 30만 달러를 지원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중동외교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이집트, 알제리, 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이는 석유 및 가스 등 전략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국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을 확대하는 데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걸프협력이사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간 FTA 추진, GCC 국가들의 탈석유 산업화 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한·중동 미래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는 대중동외교를 기존의 양자외교의 틀을 넘어 지역협력 외교로 확대·발전시켰다. 한편, 2004년 이라크 평화 정착과 전후 재건지원을 위해 쿠르드 지역인 아르빌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Zaytun Division)’는 2008년 12월 철수 시까지 평화유지 및 재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의 대중동외교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의 기치하에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오마르 하산 알 바쉬르(Omar Hassan al Bashir) 수단 대통령, 압델아지즈 보우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한승수 총리도 카타르와 쿠웨이트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 교류가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2003년부터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 정부는 중동 산유국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이들 국가 내의 한국 공관들을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 간 정례협의체를 활발히 개최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공고화하고 있다.

한편, 한·중동 간 교류가 에너지·건설 등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주목될 만하다. 우리 정부가 2008년 8월 아랍 22개국과 공동으로 민·관 합동 비영리 재단인 한·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전후하여 서울에서 ‘아랍문화축전(5월)’을, 중동 지역에서 ‘한·아랍우호친선특급카라반(10월)’을 개최하여 서로의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 ‘가을동화’를 시작으로 ‘대장금’, ‘주몽’ 등 한국 드라마들이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등 여러 중동 국가들에서 절찬리 방영됨으로써 한국 국민들과 아랍 민족의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화적 교류를 통한 연성권력의 증대는 향후 한·중동관계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테러리즘, 이라크 재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 이란 핵문제 등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분쟁 지역 내 실질적 경제 여건 개선 및 복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에 2008년까지 이미 2.6억 달러를 지원해 왔고, 향후 2억 달러(유·무상 각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까지 이미 1,3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한 데 이어, 2007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공여국회의’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서약하였고, 2009년 3월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재건회의’에서는 200만 달러를 신규 기여하기로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2007년 6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된 한국의 동명부대는 도로 포장, 어린이 공원 구축,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활동을 펼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외교 60년 역사에 비해 대중동외교의 역사는 비교적 짧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다소 늦은 편이다. 중동은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고이자 한국의 주요 해외 건설시장이다. 그와 동시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이 지역 20여 개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동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중동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동 지역과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아프리카 지역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한국전쟁 때 에티오피아 육군부대와 남아연방 비행중대가 유엔군의 일부로서 참전한 사실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교류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이른바 ‘아프리카의 해’를 맞아 아프리카 17개국이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제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대거 독립을 성취하자 이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1961년에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및 차드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 모두 24개국과 수교하였다. 그 가운데 콩고의 경우는 1962년 한국과 수교하였으나, 1964년 12월 콩고가 북한과 수교하자 단교하였다. 우리 정부는 특히 아프리카 제국이 유엔 및 비동맹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 이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외교망을 확장하고 상주대사관 8개를 설치하였다(콩고 대사관은 1965년 폐쇄).

아울러 우리 정부는 1961년 이후 매년 아프리카 제국에 친선사절단 또는 특사를 파견하여 우호협력관계의 증진 및 유엔에서의 지지확보를 위해 교섭했으며, 동시에 아프리카 제국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이들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의 유력인사를 초청하였다. 한편, 한국은 아프리카 제국과의 관계 강화책의 일환으로 1968년부터 여러 나라와 의료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의사를 파견하였다. 또한 1969년 이래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르완다, 자이르, 시에라리온, 카메룬, 가봉, 우간다,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구급차, 의료기재와 국산 의약품을 원조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은 추가로 아프리카 6개국과 수교하였다. 그러나 1974년 9월 토고가, 그리고 1975년 10월 베냉이 각각 한국과 단교하는 바람에 총 27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제국과의 통상 증진에도 노력하였는데,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 실적은 절대액으로 보면 미미했지만 1971-1977년간 연평균 신장률은 40%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건설 수출을 보면, 1974-1977년간에 4개 업체가 나이지리아, 가봉, 말라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으로부터 2,209만 9,000달러를 수주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1977년 말 당시 해외 수주 총액 75억 3,402만 달러의 0.29%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1972년 니제르와 도자기공장 건설협정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상당의 도자기 공장을 건설해 주었으며, 1975년 이래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시에라리온, 감비아, 가나, 기니, 니제르 등 각국에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경운기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감비아,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기니 등과도 각종 형태의 수산 관계 협력 및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1980년), 기니비사우(1983년), 소말리아(1987년), 쌍토메프린시페(1988년), 카보베르데(1988년) 등 5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외교망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 5월 세이셸이 한국과 단교하였기 때문에 1988년 말 당시 총 31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짐바브웨(1980년), 말라위(1982년) 및 코트디부아르(1985년) 등 3개국과 수교하여 총 39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북한은 주요 인사를 북한에 초청하고 대규모 경제 사업을 공약하기도 하고, 북한 군사교관을 파견한다든지 탄약 및 경화기 제공을 약속하여 군사협력 강화를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 공관 폐쇄 및 한국 종합상사 지사장 추방을 기도하는 등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침투 저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무상원조의 증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의한 장기 저리차관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에 정부는 아프리카 지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4개국(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을 사상 처음 순방하였고, 아프리카 제국에서는 정상들이 9명이나 방한하였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특사, 친선사절단, 기타 교섭단을 수시로 파견하여 아프리카의 많은 우방국들과 각종 협정 등을 체결하고 무상원조 제공, 태권도 사범 파견, 농업조사단 파견 등을 통하여 실질적 경제·기술협력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90년대 들어 동서 냉전의 종식은 아프리카 지역에도 민주화 운동을 가져왔으며, 차드, 나미비아, 앙골라 및 남아공 등 주요 지역문제의 해결은 역내 정세의 호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종족 간 및 지역 간 반목, 국경분쟁, 구집권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립은 여전히 정세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소 양 진영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감소와 1차산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은 아프리카 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1990년 이후 신국제질서 구도 아래 아프리카 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등 다자외교 활동의 주요 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상존하였다. 우리 정부는 1차산품의 주요 공급원, 상품 시장 및 경제 진출 대상으로서의 아프리카 대륙의 비중을 고려하여 1960년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주요 외교활동 무대였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존 외교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0년대 초부터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었는바, 콩고(1990년 6월), 베냉(1990년 10월), 토고(1991년 1월)와의 재수교에 이어 1995년 1월 세이셸과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사하라사막 이남의 모든 국가와 수교를 하였다. 1995년 1월 이전까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친북한 정책을 고수한 국가들이 한국의 수교 제의에 대하여 '선경협-후수교' 입장을 견지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들도 점차 인식을 전환하여 친한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의 소모적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새로운 환경과 외교목표에 부합하도록 1980년대 말부터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말라위,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등의 상주공관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남·남협력(南南協力) 정신에 기초하여 무상원조와 기술 공여 사업은 계속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이지리아(2,500만 달러), 가나(1,300만 달러), 우간다(750만 달러) 등에 대한 EDCF 자금 제공이며, 유엔 아프리카위원회 및 아프리카 단결기구에 대한 지원금 제공이었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제국과의 실질 협력관계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지역 분쟁은 외세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소말리아, 앙골라, 서부사하라 등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고, 인종차별정책 반대 입장에 따라 넬슨 만델라(Nelson R. Mandela)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유엔의 남아공 제재 결의를 존중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1990년대에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과도한 남북한 대결외교를 지양하면서, 실익을 중시하는 아프리카외교를 전개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로 한국의 관심이 동구권 국가로 옮겨지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다수의 아프리카 소재의 한국 공관이 철수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자 에너지·자원시장인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영향력이 신장되면서 한·아프리카 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바탕위에 경제·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프리카의 주요국인 앙골라(2007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2008년 7월), 카메룬(2008년 9월)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재 한국 공관은 13개로 증가하였다.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외교 강화 노력은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 순방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상으로는 24년 만에 이루어진 아프리카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규모를 2008년까지 3배 확대키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해찬 총리, 한명숙 총리, 반기문 외교장관 등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등 고위 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2006년 8월 기니와 수교하여 아프리카 53개국 모든 국가와의 국교 수립을 마무리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6년 11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서 양 지역 간 민·관 합동 협의채널인 제1차 한·아프리카 포럼(Korea-Africa Forum)을 ‘21세기 아시아·아프리카 공동번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아프리카 정상 5명과 각료 27명 및

학자들이 참가하여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 발표 이래 대아프리카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2008년도에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된 총 7,4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아프리카에 제공하였다. 대아프리카 EDCF는 2008년 3,400만 달러를 지원(집행액 기준)하여, 2005년 대비 1.5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6-2008년까지 총 2,045명의 아프리카 연수생을 초청하고, 3년간 총 704명의 해외봉사단을 아프리카 각국에 파견하여,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인적자원개발에 공헌하였다. 2007년 9월에는 출국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모금되는 재원으로 아프리카의 3대 질병(HIV/AIDS, 말라리아, 결핵) 퇴치를 지원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250여 명의 공병대대(상륙수 부대)를 파견한 이래 총 14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라이베리아(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에, 2005년 12월부터 수단(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에 군 옵저버와 참모장교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제6위의 해운국이자 소말리아 해적 피해국으로서 2008년 채택된 소말리아 해적 퇴치 관련 4개의 안보리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를 통해 소말리아 인근국의 해적 퇴치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특히 청해 부대(문무대왕함)가 2009년 4월부터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파견되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원·선박을 보호하고,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 공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대아프리카 정상외교를 비롯한 고위급 방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역과 자원부문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ODA 정책을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가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